[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14년도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시험 기출문제

〔경제학〕

제 1 문. 순수한 복점시장에서 기업 1과 기업 2가 직면한 어떤 재화의 시장수요함수가 $P=10-Q$이다. 이 기업들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며, 각 기업의 총비용은 모두 0이다. 여기서 P는 재화의 시장가격이며, Q는 두 기업의 생산량의 합 (q_1+q_2)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기업 1과 기업 2가 동시에 생산량을 결정하는 꾸르노(Cournot) 모형을 고려해보자. 이때 각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최대로 하는 생산량$(q_1,\ q_2)$을 구하고 시장가격(P)을 도출하시오. 또한 각 기업의 이윤$(\pi_1,\ \pi_2)$을 구하시오. (10점)

2) 이 두 기업이 담합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담합 기업의 총비용 역시 0이다. 이때 담합 기업의 최적 총생산량(Q)과 담합가격(P)을 구하시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이윤$(\pi_1,\ \pi_2)$을 구하시오. (단, 담합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frac{Q}{2}$라고 가정한다) (10점)

3) 만약 기업 1이 위 담합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이윤을 최대로 하는 기업 1의 생산량(q_1)을 구하시오. 이와 같이 기업 1에 의해서 담합이 깨어질 때, 시장가격(P)과 개별 기업의 이윤$(\pi_1,\ \pi_2)$을 구하시오. (단, 기업 2는 담합에서 설정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10점)

제 2 문. 세계는 본국과 외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는 단일생산요소(노동)만을 보유하고 있고, 재화 A와 B를 생산할 수 있다. 본국의 총노동공급량은 L로, 재화 A와 B의 생산에 필요한 본국의 단위당 노동소요량은 a_{LA}와 a_{LB}로 각각 표시한다. 외국의 총노동공급량은 L^*로, 재화 A와 B의 생산에 필요한 외국의 단위당 노동소요량은 각각 a^*_{LA}와 a^*_{LB}로 표시한다. Q_A는 본국의 재화 A 생산량, Q_B는 본국의 재화 B 생산량을 나타내며, Q^*_A는 외국의 재화 A 생산량, Q^*_B는 외국의 재화 B 생산량을 나타낸다. 또한, P_A와 P_B는 각각 재화 A와 B의 가격을 나타낸다. 리카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본국의 총노동공급량과 재화 A, B에 대한 단위당 노동소요량은 $L=2,400$, $a_{LA}=6$, $a_{LB}=4$이며, 외국은 $L^*=1,600$, $a^*_{LA}=10$, $a^*_{LB}=2$이다. 본국과 외국의 생산가능곡선을 도출하시오. 이때 본국과 외국의 재화 B로 표시된 재화 A의 기회비용을 구하시오. (단, X축은 재화 A의 생산량을, Y축은 재화 B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5점)

2) 1)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두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때 세계시장의 상대적 공급곡선(RS)을 도출하고, 각 상대가격 구간별 의미를 설명하시오. (단, 상대적 공급곡선의 X축은 $\frac{Q_A+Q^*_A}{Q_B+Q^*_B}$, Y축은 $\frac{P_A}{P_B}$이다) (10점)

3) 본국의 총노동공급량(L)이 3,600으로 증가하였다고 가정하자. 본국의 총노동공급량 변화로 인한 상대적 공급곡선을 도출하고, 2)의 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두 국가는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과 무역을 하고 있다. 두 국가 간 무역에 운송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즉, 한 단위 재화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t\times 100$ %만큼 운송비로 사라진다. 이때, 두 국가 모두 무역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 위한 세계균형가격($\frac{P_A}{P_B}$)의 범위를 구하시오. (단, $0<t<1$이다) (15점)

제 3 문.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다. 인수대상이 되는 기업은 우량 기업(G유형)이거나 비우량 기업(B유형)일 수 있다. 이 기업의 현주주는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 기업이 G유형인지 B유형인지를 알고 있다. 반면, 투자자는 이 기업의 유형을 모르며 다음 표와 같은 가치의 확률분포만을 알고 있다.

기업유형	G유형	B유형
확률	0.5	0.5
현주주 가치	40억 원	20억 원
투자자 가치	50억 원	25억 원

현주주는 투자자가 자신의 평가금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무조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기를 원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30점)

1) 투자자가 40억 원을 지불하고 이 기업의 전체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투자자의 기대이윤 혹은 기대손실을 계산하시오. (5점)

2) 투자자가 이 기업의 전체 지분에 대한 인수가격으로 20억 원을 제시할 경우 이 기업이 인수될 확률, 또 기업인수가 성사되었을 경우 인수한 기업이 G유형일 확률과 B유형일 확률을 각각 계산하시오. (10점)

3) 투자자는 G유형의 기업과 B유형의 기업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거래를 제시하여 현주주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i) 전체 지분의 절반을 15억 원에 인수(이 경우 현주주가 얻게 되는 가치는 15억 원 + 0.5 × 투자자 가치)
ii) 전체 지분을 28억 원에 인수

거래 i)하에서 G유형과 B유형의 현주주가 얻게 되는 가치를 각각 계산하여 거래 ii)하에서의 매도금액과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현주주가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현주주에게 거래조건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2)의 문제와 결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단, 투자자는 전체 지분의 절반을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5점)

〔국제법〕

제 1 문. A국은 C국의 오랜 식민지배로부터 1995년에 독립하였다. C국은 1985년에 인접한 B국과 조약(1985년 조약)을 체결하면서, C국과 B국 사이의 국경분쟁이 있었던 X지역에 대한 B국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A국은 독립 후 1985년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X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군사력이 우세한 A국은 무력행사를 통해서라도 X지역을 되찾기로 결정하였다. A국은 2010년 1월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는 한편, B국의 주요 항구를 모두 봉쇄하여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였다. 이어 X지역이 A국령임을 인정하는 조문을 포함하여 A국과 B국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A국의 군사적 시위에 굴복한 B국은 2010년 3월 A국이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 조약(2010년 조약)을 체결하였다. A국은 1995년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조약법 협약)"에 가입하였고, B국은 1969년 조약법 협약의 원당사국이다. (총 40점)

1) B국과 C국이 체결한 1985년 조약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A국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20점)

2) B국은 2010년 조약 중 X지역에 관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머지 조항을 유지하기 원한다. 이러한 B국의 입장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하시오. (20점)

제 2 문. 인접하고 있는 A국과 B국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이다. A국의 대통령은 최근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1개 연대 병력을 B국에 파병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 부대는 작전수행과정에서 약 3,000명의 B국 민간인을 살해하였다. A국이 민간인의 살해에 대하여 그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A국의 대통령을 살해의 책임자로 보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B국은 A국의 무력사용 및 민간인 살해행위에 대하여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하고자 하였으나, A국은 이에 대한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A국과 B국 사이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위 사안에서 ICC 및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단, 유엔 회원국인 A국과 B국은 ICC 규정의 비당사국이다) (30점)

제 3 문. 반도국가 A와 대륙국가 B는 300해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있고, 도서국가 C는 A국으로부터 300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 A국과 B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100미터이며, A국 연안 쪽이 B국 연안 쪽보다 약간 더 깊다. A국과 C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500미터이며, C국 연안 쪽에 수심 3,000미터에 달하는 해구가 위치해 있다. A국은 B국 및 C국과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선을 획정하는 외교협상을 준비 중이다. A국이 양국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국제법상 경계획정 원칙과 방법들을 검토한 후, 해양영역 확보와 관련하여 A국이 B국과 C국 각각에 대하여 견지할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시오. (30점)

〔국제정치학〕

제 1 문. 국제체제의 성격은 강대국 간 힘의 분포로 설명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현재까지의 국제체제는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극체제(unipolarity)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1) 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2) 일극체제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3)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제 2 문. 최근 해양 지정학(geopolitic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해양을 둘러싼 주권 및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경우 해양 지정학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40점)

1) 대표적인 지정학자들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10점)

2) 해양세력이 가질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우위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3) 중국이 해양세력으로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관계를 설명하시오.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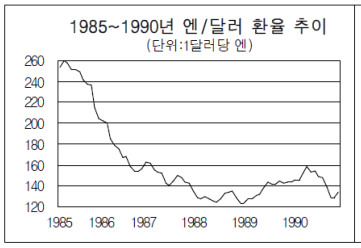
〔학제통합논술 Ⅰ〕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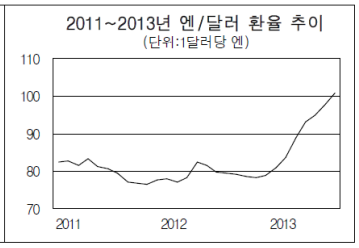
<제시문 1>

○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시 플라자호텔에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로 구성된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엔화와 마르크화를 평가절상하기로 했다. 플라자호텔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 '플라자합의(Plaza Accord)'라고 불린다. 1980년대 초에 개인의 소득세 감세 조치와 재정지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있었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불렸던 이 경제정책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높아진 달러화의 가치 때문에 무역적자까지 심각해지자 주요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G5가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마르크화는 1주일 만에 약 7%, 일본의 엔화는 약 8% 평가절상 되었고,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져 2년 후에는 30% 이상 평가절하 되었다.

○



<그림 1>



<그림 2>

<제시문 2>

Plaza Accord, September 22, 1985

[...]

12. The Finance Ministers and Governors affirmed that each of their countries remains firmly committed to its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s leading industrial nations.[...]

16.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y would monitor progress in achieving a sustained non inflationary expansion and intensify their individual and cooperative efforts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18. [...]The *French Government* intends to pursue its policy aimed at reducing inflation, moderating income growth, and achieving continued improvements in external accounts. It will further intensify its efforts to speed up structural adjustment and modernization and thus lay the basis for job creating growth.[...]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ll implement policies with the following explicit intentions: 1. The priority objective of fiscal policy is to encourage private initiative and productive investments and maintain price stabilit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implement policies with the following explicit intentions: 1. Resistance of protectionism and steady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rogram announced on July 30 for the further opening up of Japan's domestic market to foreign goods and services. 2. Full utilization of private sector vita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igorous deregulation measures. 3. Flexible management of monetary policy with due attention to the yen rate. 4. Intensified implementation of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and of the yen, so that the yen fully reflects the underlying strength of the Japanese economy.[...]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noting that the British economy has been experiencing steady growth of output and domestic demand over the past four years, will continue to pursue policies designed to reduce inflati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firmly committed to policies designed to: ensure steady non inflationary growth[...]

<제시문 3>

This time the pressure for adjustment came from the United States. By 1985 the strong dollar produced a record U.S. trade deficit to match record budget deficits, and that sparked a broad protectionist backlash from U.S. industry and Congress. The strong dollar also helped to cause and exacerbate the Latin American debt crisis of 1982–85, a crisis that depressed U.S. export markets and jeopardized what Reagan officials were touting as a transition to democracy in the Western hemisphere. Europe's problem was now America's problem, and the Reagan administration abruptly shifted from ignoring pleas for policy coordination to demanding it of its allies, particularly Japan and West Germany. The Plaza Accord of September 1985 reflected a successful, coordinated effort by governments to intervene in currency markets to ease the dollar down and the mark and yen up. Between September 1985 and February 1987 the dollar value of the yen appreciated from 240 to 150, and of the mark, from 2.85 to 1.85. The adjustment was particularly painful for Japan, and by the late 1980s the challenge of the high yen helped precipitate Japan's bubble economy, deep recession, and decade-long stagnation. Japanese cooperation was driven by its economic and securit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Excessive reliance on the U.S. market meant that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as significant a threat to Japan economically as to the Reagan administration ideologically; cooperation with the executive on exchange rates to manage the problem was preferable to leaving its solution in the hands of a not so friendly Congress. Japan also perceived a growing security threat from the Soviet Union during the 1980s. The Soviets built up forces in Northeast Asia and in the disputed Northern Territories, shot down a Korean airliner over the Pacific, and operated nuclear submarines with greater regularity in proximity to Japan. In response, Prime Minister Nakasone embraced the Reagan administration's objective of transforming Japan from a reluctant ally into a more strategic one. Japan increased defense spending, accepted responsibility to defend its sea lanes to a distance of one thousand nautical miles, and increased economic aid to countries such as Egypt and Turkey deemed critical by the United States. Having committed to a closer bilateral partnership as America's "unsinkable aircraft carrier," Japan was hardly in a position to resist exchange rate cooperation.

<제시문 4>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미국 상무부에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하여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감시개혁법안'이 2011년 10월 11일 미국 상원에서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되었다. 중국은 이 법안이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환율불균형이란 명분 아래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 의회 및 각계에 국내 입법 형식으로 위안화 환율문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고 보호주의를 억제해 줄 것과 경제문제를 정치화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하였다. 중국 상무부도 위 법안은 "국제규범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중간 경제무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공동노력과 보호무역주의 억제 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환율이 미중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아니라며 미국이 위안화 환율을 문제 삼는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문 제>

제 1 문.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조하여 '플라자합의'의 국제법적 성격을 논하시오. (25점)

제 2 문.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조하여 <그림 1>과 <그림 2> 간의 환율변동 차이를 가져온 주요 경제정책을 비교하고, 그 정책의 전달경로를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제 3 문.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참조하여 미국과 일본이 '플라자합의'에 동의한 정치적 배경을 국내적, 국제적 측면에서 논하시오. (25점)

제 4 문. '환율감시개혁법안'의 미국 상원 통과에 대한 중국의 주장 및 대응방안을 국제법적으로 설명하시오. 현재와 같이 위안화 평가절상이 지연될 경우 중국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비용을 설명하시오. 또한, 평가절상이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적 비용을 국내적, 국제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25점)

〔학제통합논술Ⅱ〕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일부 발췌)

채택일자 1977년 06월 08일, 발효일자 1978년 12월 07일, 당사국 수 174개국(2014년 5월 1일 현재)

제48조 기본규칙

민간주민과 민간물자의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항시 민간주민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별하며 따라서 그들의 작전은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한다.

제51조 민간주민의 보호

4. 무차별공격은 금지된다. 무차별공격이라 함은,
   가.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
   나.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또는,
   다. 그것의 영향이 본 의정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한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 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제52조 민간물자의 일반적 보호

1. 민간물자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물자라 함은 제2항에 정의한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한다.
2.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목표물에 한정된다. 물건에 관한 군사목표물은 그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적 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제시문 2>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국내외 사안들이 사이버 공간에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혜택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서부터 사이버 테러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로 컴퓨터 내에 번져 나가는 정보 세계이며,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물리적인 실체와 떨어진 가상공간"으로 정의된다.

사이버 공간을 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라는 용어로 집약되며 비전통적 안보에 포함된다. 이 안보 영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서 모든 요소들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턱스넷(Stuxnet) 웜 바이러스의 이란 핵시설 공격, 우리나라의 2009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등과 같은 사이버 공격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가, 기업,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시문 3>

□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 규칙2 관할권

적용 가능한 국제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국가는 다음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a) 자국의 영토 내에서 사이버 활동을 행하는 자

(b) 자국의 영토 내에 소재하는 사이버 기반시설

(c) 국제법에 따른 역외 사항

○ 규칙6 국가의 법적 책임

국가는 자신에게 귀속 가능하며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사이버 작전에 대하여 국제법적 책임을 진다.

○ 규칙7 정부의 사이버 기반시설에서 착수된 사이버 작전

사이버 작전이 정부의 사이버 기반시설에서 착수되었거나 또는 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작전을 그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고, 다만 문제의 국가가 그 작전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규칙8 어떤 국가를 경유한 사이버 작전

사이버 작전이 어떤 국가에 소재한 사이버 기반시설을 경유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해 작전을 그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 규칙39 민간 및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

민간 및 군사적 목적 모두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및 사이버 기반시설 포함)은 군사목표물이 된다. (이상 일부 발췌)

The Tallinn Manual,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at the invitation of the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in 2013, was designed to produce a non-binding document applying existing law to cyber warfare. The group was composed of twenty renowned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e Manual "identifies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and sets out ninety-five 'black-letter rules' governing such conflicts. It addresses topics including sovereignty, State responsibility, the *jus ad bellum*,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 of neutrality. An extensive commentary accompanies each rule, which sets forth each rule's basis in treaty and customary law, explains how the Group of Experts interpreted applicable norms in the cyber context, and outlines any disagreements within the group as to each rule's application."

<제시문 4>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사이버 안보는 사회적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사이버 안보의 공급을 시장에 맡긴다면, 민간 소비자들 간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들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사이버 안보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금전적 유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적 개입을 추구할 수 있다.

<제시문 5>

미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되고 있는 기밀이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경쟁력을 빠르게 신장시키고 있고, 이러한 위협이 계속된다면 군사적 우위와 지배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사이버 안보 문제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설정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자국도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영역에서 기선을 잡기 위하여 적극적인 탐색전에 돌입했다. 미국은 현재의 사이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국제법과 레짐의 조성을 선점하고, 중국이 이 국제규범을 수용하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규범을 지키면서 미국과 경쟁하여 세력균형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자국에 유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 제>

제 1 문.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조하여 전통적인 안보와 사이버 안보의 차이를 서술한 후, <제시문 3>의 문서가 <제시문 1>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규범적 지위와 가치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이 문서가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국제레짐의 확산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총 35점)

제 2 문. <제시문 4>와 <제시문 5>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4>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사이버 안보의 결정을 사회적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정부 개입의 근거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기능이 국제관계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국제정치 이론을 사용하여 논하시오. (총 35점)

제 3 문. <제시문 4>에 따라 사이버 안보 서비스의 시장공급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경쟁력 있는 해외 업체에게 사이버 안보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서비스의 특성상 해외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먼저, 사이버 안보 서비스 시장을 해외업체에게 개방하였을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장단점을 논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3>에 기초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해외 사이버 업체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를 논하시오.

(총 30점)